

인플레이 재발이 더 무섭다

경제포커스



방현철
경제부 차장

“구조적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 9.1%에서 12월 6.5%로 속도가 줄었다. 하지만 다이먼 회장은 유가가 잠시 진정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10년간 오를 것으로 봤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도 결국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봤다.

다. 더구나 폭지는 1970년엔 6.4%, 1974년엔 12.2%, 1980년엔 14.6% 등 갈수록 높아졌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마저 임기 초기인 1980년 잠깐 고개를 숙였던 인플레이션에 깜빡 속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1979년 8월 취임한 볼커는 돈을 조여 금리를 높였다. 이듬해 4월 금리는 연 17%까지 올랐다. 하지만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카터 대통령은 고금리 고통이 심해지지 않기를 바랐다. 마침 물가도 폭지를 찍었다. 그에 맞춰 볼커는 금

美 70년대 3차례 高물가 닦쳐 인플레이 재발하면 더 큰 고통 “하반기 회복된다” 맹신 말고 L자형 침체 가능성도 대비해야

리를 연 9%대로 낮췄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방심한 틈을 타 12%대에서 13%로 뛰었다. 볼커는 물가 잡기의 침범이란 신뢰를 되찾느라 이후 금리를 연 20% 가까이로 높여야 했다. 미국 경제는 1년 넘게 강한 침체 수렁에 빠졌다. ‘볼커의 실수’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알았다가 재발하면 더 큰 비용을 든다는 교훈을 얻었다.

월가의 다수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 낮다가 하반기에 반등) 흐름을 내다보면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짧고 얇을 것이라고

본다. 그 바탕엔 올 하반기엔 물가가 잡히고 연준은 금리 인하로 돌아서서라기 대가 깔려 있다. 그렇지만 1970~1980년대에 겪은 시절을 보면 다이먼 회장 같은 이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부른 낙관을 경고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고위 인사들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고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미국이 기침만 해도 몸살을 앓는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불확실하다. 한국 경제 앞길의 안개가 아직은 짙다는 얘기다. 안개로 앞이 안 보일 땐 안전이 최우선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가정하고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그런데 ‘상저하고’만 맹신하다 경기 부양 실탄이 떨어지는 실책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기가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L자형 장기 침체’가 나타나면 정부에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경기 부양 정책을 상반기에 ‘올인’ 하기보다는 고통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분산’ 할 필요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171]

칠로에섬의 목조 성당

‘갈매기의 땅’이라는 뜻의 칠로에(Chiloé)는 칠레의 남단, 파타고니아가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한 군도(群島)다. 이곳에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부족의 원주민이 살았는데, 1567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하면서 특유의 융합된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608년 예수회(Jesuit)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짓기 시작한 성당 건물들이다.

선교사들은 유럽의 성당을 모델로 했지만 대리석 같은 석재도, 정교한 구조를 만드는 기술도 뒷받침되지 못했다. 가능했던 건 섬에 흔한 나무, 그리고 배를 만들던 섬사람들의 손재주뿐이었다. 그래서 유럽의 건축을 본뜨되 배를 제작하던 기술을 응용해서 목재로 짓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류 건축 양식이 지역

의 공예 기술과 결합된 멋진 토속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이 탄생했다. 종탑과 경사진 지붕, 대칭의 정면과 아치형 입구는 신고전주의나 네오고딕 양식으로, 볼트 천장은 둥근 배의 바다를 뒤집은 형태로 건축됐다.

내부는 종교적 그림들과 섬에서 사용하던 원색의 칠로 장식했다. 고전 건축 양식의 기둥조차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투박한 목공과 촘촘하지 않은 하늘색 칠이 지극히 아름답다.

오랜 세월 동안 칠로에섬의 많은 성당들이 화재나 홍수로 파괴되었다. 현재 섬에 남아있는 성당 60여 개 중 16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당은 보통 침수를 피하고 뱃사람들의 이정표 역할을 위해서 해변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지어졌다.



그중 아타오(Achao) 마을에 있는 ‘산타 마리아(Iglesia Santa Maria de Loreto)’는 1754년 지어진, 칠로에섬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성당이다. 이 성당 앞 광장에는 벤치가 여러 개 놓여 있다. 미사를 보러 실내로 들어오는 신도뿐 아니라 건축 답사나 관광을 목적으로 성당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를 배려한 마음이다. 신에 대한 숭배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지만, 지역 사회를 포용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뉴욕 FIT 교수·마에미대 명예석좌교수



社 說

포플리즘 대가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탄’

가스 요금이 급등한 가운데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 등을 약 38% 올린 것이 겨울철 한꺼번에 가계 부담으로 덮쳐 왔다. 산업부는 올 1분기에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포플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다.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1년 9개월간 동결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 이로 인해 LNG 공급을 도맡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더 이상 못 버틸 지경에 내몰렸다. 한국전력 역시 문 정부가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 전기 요금 인상을 미뤄 지난해 30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냈고 올해도 18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나경원 사태’ 봉합 與, 전화위복과 자해의 갈림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국민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부분이 있기에,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했다. 나 전 의원 출마를 놓고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져 다했던 여당 내분이 가까스로 봉합된 것이다. 재연된 뻘뻘한 집권당의 이전투구가 이쯤에서 끝난 것은 국정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여당 국정 운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취임하고 불과 두 달 만에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했다. 애초에 자리를 맡지 말아야 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했다. 3년 연속 줄고 있다. 함께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약이다. 나라가 무너지지 경이다. 이런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놓고 저출산위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정치 충돌을 벌였다.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도 대화, 조정도 아니라 사의 표명과 해임이라는 충돌뿐이었다. 해임 뒤에도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안다”는 나 전 의원과 “그간의 처신을 생각해보라”는 대통령실 즉각 반박이 이어졌다.

‘이준석 사태’가 봉합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내분이 불거진 것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 포플리즘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경악했다”면서 안 그래도 적자인 예산을 또 늘려 15만~45만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에너지 가격 체계와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반성은 커녕 또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 해결책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뿐이다. 2021년부터 작년 6월 사이 영국은 전기 요금을 89%나 올렸고, 일본(36%) 프랑스(26%) 미국(22%)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이 국제 가격 인상 폭을 국내 에너지 요금 체계에 반영했다. 요금을 올려야 소비가 주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전기 요금 인상은 4.6%에 그쳤다. 그 결과 국제 에너지 값이 급등했는데도 원유·가스 수입액은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은 포플리즘을 당장 그만둬야 하고,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저소득 계층에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교환권) 지급을 강구해야 한다.

은 이제 겨우 상승세를 타려는 국정 신뢰도에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전 의원의 총독하는 전면에선 쪽은 이른바 ‘친윤’ 세력이었다. 항간에는 이들이 당권을 장악하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 과거 친박 과당과 같은 공천 전환을 할 것이라 예상이 적지 않다. 그런 잡음과 내분에 휩싸인 정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적 없다.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공공 개혁 등 나라 명운이 걸린 과제를 안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또다시 소수당이 되면 모든 개혁이 물 건너가게 된다.

이제 국민의힘 대표 경선 구도는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됐다. 더 이상의 개입은 역풍을 부를 것이다. 새해가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무역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었다. 물가 상승도 심각하고 난방비 급등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도 머지 않아 도발을 시작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 대책도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 윤 정부가 국정에서 성과를 보여준다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그 반대면 누가 당대표가 돼도 국민은 외면한다. 나경원 사태가 집권당 자해극이 될지 아니면 전화위복이 될지 갈림길에 섰다.



“트럼프, 김정은이 文 동석 거부”가 ‘왜곡’이라더니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펠낸 회고록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트럼프·김정은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게 직접 전화해 회동 참여를 요청했고, 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했다. 폼페이오의 기술은 “미·북 정상이 문 대통령의 동석을 거부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도 일치한다.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장 증인이 밝힌 내용을 다시 보니 김정은에게 안달하는 문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폼페이오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김정은이 영변 단지 해체의 대가로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한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 요구대로 됐으면 북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다. 그런데 북 요구대로 해주자고 재촉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볼턴 회고록에 대해 “왜곡”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3월 폼페이오가 김정은에게 “중국 공산당은 주한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당신이 매우 행복해할 거라고 하더라”고 말하자, 김정은은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말 가운데 중국의 속셈에 대한 평가는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 북한은 티베트와 신장의 길로 가고 있다.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식량·석유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 ‘북한은 동북 4성’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런 중국을 높은 신봉우리라고 우러러본 것도 문 전 대통령이었다.

지하엔 직파-고정간첩 우글, 지상에 통일전선 부글... 전국 간첩단이 말해주고 있다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 혁명”은 통일전선 전술의 다른 이름, “북한 공산당과 남한 주사파는 앙코르와트서 서로 코드 맞춰”

뉴데일리

지하(地下) 혁명과 지상(地上) 혁명

전국적 규모의 간첩조직이 적발되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남베트남 적화과정을 돌아보자.

(1) 지하(地下) 혁명

뉴욕 타임스 닐 시한 기사는 1970년 10월 19일 자 머리기사에서 북베트남은 30,000명 이상의 첩자들을 남베트남 대통령실-도지사실-경찰-정보기관에 심어 놓았다고 썼다.

(2) 지상(地上) 혁명

1964년 미국 랜드 연구소 상담역 조셉 자슬로프는 자신이 작성한 ‘비망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반체제운동(민족 해방전선, NLF)을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자신들은 도의적 지원만 한다고 발뺌한다” 남베트남 반체제운동과 북베트남 공작은 한통속이란 뜻이다.

대규모 간첩단 사건의 의미

베트남 사태 (1), (2)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번 간첩 사태로, 한국의 일부 극렬 반체제 활동도 북한 대남공작과 한통속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북한 대남공작의 초보적 양태(雛態)는 스파이 활동이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지하조직 구축과 정치투쟁으로 나간다. 이번 간첩단도 그랬다. 진보당-민노총 같은 남한 좌파 정당·사회단체에 잠복해, ‘반미(反美)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회색했다.

2022년 가을의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민노총 지도부는 ‘사회대전환’을 호언(豪言) 했다. 체제 혁명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들은 이런 구호도 내걸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종속적 한·미 동맹 폐기,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권 반대”

이게 노동자 권의 추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리고 뭐, 전쟁위기를 우리가 조장했다고?

[북한 남조선 혁명 + 남한 주사파 혁명]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갈등, 부딪힘, 엇갈림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그 어둠의 에너지를 한 줄로 뻗는다. 통일전선이다.

‘통일전선’에 주목하라

이 [통일전선] + [거짓 선동] + [홍위병] 방식으로 반미(反) 대한민국의 봉기를 조직한다. 효순이-미선이 사태-광우병 난동-탄핵 정변으로, 정권을 두 번씩이나 망가뜨렸다.

문재인 정권 때는 가짜 평화협정, 미군 철수, 연방제 개헌, 대기업 탈취, 군(軍) 무력화, 대공 수사력 왜해가 감지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간첩 수사도 하지 않았다. 지하에선, 직파 간첩·고정간첩이 우글거린다. 지상에선, 통일전선의 용암이 분출한다. 3.9 대선 때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90%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남으려면?

이 끔찍한 사태를 막아야만, 우리 2세, 3세들이 살 수 있다. 어떻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2024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전투적 자유세력이 기회주의 강남좌파를 제쳐야 한다. 그래야 2024 총선에서, [북한 대남공작+남한 주사파]와 제대로 맞짱 뜰 수 있다.

자유 아니면 죽음!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이 광고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발행일 1월 15일 게재 되었습니다.

